

보도일시 (인터넷) 2023. 5. 3.(수) 11:00
(지면) 2023. 5. 4.(목) 조간

배포 2023. 5. 3.(수) 06:00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수산정책협의회 5. 4. 개최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수산 및 어촌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수산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 논의할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협중앙회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3. 5. 4.(목) 13:30~15:00 / 세종청사 회의실

(참석) 해수부(수산정책실장, 어촌양식정책관, 수산정책과장 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부대표 등

수산정책협의회는 어가 인구감소, 어촌지역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수산 및 어촌지역의 현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수산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축산업 및 어선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적은 양식어업의 소득 비과세 확대, △면세유류 및 폐유 수거시설 지원 합리화 방안, △단위수협 상호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어촌계 육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분기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하고 보완사항도 협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수산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수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촌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420)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044-200-5429)

1. 추진 배경

- 어가 인구감소, 어촌지역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수산 및 어촌지역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 정부와 수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업인과 어촌지역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대책 마련 추진

2. 운영 방안

- (구성) 수산정책실장-수협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우리부 국·과장과 수협 부대표 등이 참여
- (기능) 해수부-수협 공동 안건 수립, 수산분야 주요 현안 논의 등
 -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면세유 지원 합리화, 상호금융 활성화, 건전한 어촌계 육성 등
- (안전관리) 안전별로 해수부, 수협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논의 및 KMI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 병행 추진
- (운영)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별 담당자가 논의 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분기별 회의)